고사 위기 전남 연근해 어업

면세유값 2배↑… 배 한척당 3천여만원 적자

〈근해어업〉

그물값 40% 올라 출어포기·감척신청 급증

"어선어업 기업화·규모화로 경쟁력 높여야"

기름값과 조업장비 가격 등 생산비의 전반적인 증가가 전남지역 연근해 어업 어가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이로 인해 배 한척 당 연평균 3천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렸던 근해 어업은 거꾸로 올해에는 3천만원~3천500만원의 적자를 볼 것으로 예상되며, 연안 어업도 소득이 10~15%(약 100만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원인**=근해 어업의 적자와 연안 어업의 소득 감소 원인은 지난 해 대비 2배 가까이 오른 기름값이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 면세유의 현재 공급가격은 드럼당 19만91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0만3천540원의 배에 달하고 있다.

여기에 20m짜리 한 폭당 2만5천원이던 그물 값이 1년 만에 3만5천원으로 무려 40%나 뛰는 등 어구(漁具) 가격 인상 등 조업비 부담이 대폭 늘어난 것도 전남지역 연·근해어업에 타격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결국 기름값과 어구가격 등 배 한척(근해어선)을 운영하는데 드는 경영비가 1년 사이 5억7천994만원1천원에서 6억5천265만1천원으로 12.5%가 늘었다. 연안 어선의 경영비도 11% 이상 증가했다.

◇**실태**=이처럼 바다에 나가봐야 손해만 보는 상황이 계속되자 어가들은 배를 아예 세워 두거나 감척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택하고 있는 것이다.

전남지역에서는 이미 연근해어선 478척이 감척되는 등 올해말까지 약 930척의 어선이 사라질 전망이다.

지난 1994년부터 지난해까지 14년 동안 전남지역에서 줄어든 연근해 어선이 총 1천800여척(1천952억원 예산 투입)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하면, 올 감척 어선수는 예상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전남의 어선 감척 규모를 어선별로 보면 연안어선의 경우 올 한햇동안 총 880척(전국 3천500척의 25%)이 줄어들게 되며, 예산은 544억원이 투입된다. 또 근해어업은 오는 19일까지 일선 시·군을 통해 감척 신청을 접수받고 있으며, 전국 총량 484척 가운데 전남에서 최소 50척이 감척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이 감척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데는 고유가 상황이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어가들의 판단과 연안어선 감척에 대한 지원이 올 연말까지라는 만료된다는 점, 그리고 근해어선 감척에 대한 지원이 오는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이뤄진다는 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70t급 안강망 어선 선주 L모씨는 "면세유 값이 지난 해에 비해 배 이상 올라 한 달에 두번 출어하는 데 들어가는 기름값이 적게는 4천만원에서 5천만원이나 되고, 조업장비료와 인건비도 올라 출어해봤자 손해를 보게 된다"면서 "여의치 않을 경우 감척 신청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책**=전문가들은 고유가, 고물가에 따른 조업비 상승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어선어업의 기업화와 규모화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배를 최소 10척 단위로 기업화할 경우, 생산비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판매망 구축 용이, 어장에 대한 정보 증가 등으로 인해 저비용 고효율 구조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소규모 어선 선주 4~5명이 공동으로 대형 어선을 건조해 운영하는 어선의 규모화도 경영비 절감 등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고유가 여파로 전남지역 연·근해어업이 적자로 전환되는 등 한계상황에 부딪히면서 어민들의 출어포기, 감척 신청 등이 크게 늘고 있다. 출어를 포기한 어선들이 여수 국동항에 묶여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호남고속철 조기 완공 李대통령 공약은 유효"

한승수 총리 밝혀

한승수 국무총리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밝힌 '호남고속철도 2012년 완공' 공약은 유효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한 총리는 구체적인 예산 반영 계획 등을 밝히지 않아 호남고속철의 조기 완공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16일 민주당 예결위원인 이용섭 의원(광산 을)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현재 기본 설계를 담당하는 전문가와 함께 구간별 조기 준공 가능성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호남고속철의 2012년 완공이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유효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총리는 또한, "앞으로 예산의 적기 투입과 설계 및 공사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 호남고속철도의 완공 일정을 최대한 단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호남고속철의 조기 완공과 관련, 청와대와 국토해양부가 엇박자를 내고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한 총리는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니며 정해진 행정 절차에 따라 확정되지 않은 호남고속철도 조기 완공 일정을 공식 자료에 표기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이용섭 의원은 "국무총리가 호남고속철도의 2012년 완공 사업이 유효하다고 밝힌 것은 상당한 성과"라며 "지난 2006년 고시한 호남고속철도의 기본계획을 조기에 수정, 목표 연도를 2012년으로 당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호남고속철도의 조기 완공은 정부 차원에서도 상당한 예산 부담이 있다"며 "호남권과 충청권이 100만인 서명 운동 등을 통해 호남고속철도의 2012년 완공에 대한 지역의 염원을 정부에 전달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나주시의회 비난 의정보고서' 조사

나주시 선관위

동료 의원과 단체장 등에 대한 비난 일색의 의정 보고서를 발송, 물의를 일으켰던 나주시의회 특정 정당 소속 의원들에 대해 선관위가 조사에 들어갔다.

나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시의회 민주당 소속 9명(비례대표 2명 포함)의 이름으로 발송된 의정 보고서에 대해 선거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 선관위는 "이 보고서가 통상적 의정활동 보고서의 수준을 넘어선 정치적 유인물로 판단, 내용과 작성 경위 등을 조사중이다"고 덧붙였다.

문제의 보고서는 A4용지 5장 분량의 편지 형식으로 조례안 제정 등 의정활동 내용은 전혀 없고 무소속 동료 의원과 신정훈 시장, 지역사회 단체 등을 맹비난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이 보고서는 의장단 구성 과정에서의 파행 원인 해명 및 전가, 시민단체에 대한 반감 표출 등이 담겼다는 지적이며 지난달 26일께 민주당 원과 주민 등 5천여가구에 일제히 발송됐다.

시 선관위는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J의원 등을 불러 작성 경위 등을 집중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N의원 등 일부 의원은 '보고서 작성 여부 조차 알지 못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져 명의도용 의혹도 일고 있다.

시 선관위는 "관련 조사 내용을 일단 도 선관위에 보고했으며 선거법 위반 여부 등은 이달중으로 도 선관위가 최종 판단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선거일 90일전까지는 의정 보고서를 자유롭게 낼 수 있으나 인쇄물 등을 이용, 낙선 등을 목적으로 특정인을 비방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나주=정칠현기자 chjung@

신재생 에너지사업 최종 선정 주력

광주시·전남도 광역경제권 후속 조치 착수

정부의 광역경제권 활성화 선도사업 선정과 관련, 광주시와 전남도가 예산 조기확보와 선도산업 최종 선정 등을 위한 후속조치 마련에 나섰다.

16일 광주시·전남도에 따르면 정부의 광역경제권 부처별 사업 중 광주·전남지역과 관련된 사업은 핵심 선도프로젝트로 뽑힌 ▲여수엑스포 ▲다도해 개발 연륙교 건설 ▲호남고속철도 건설 등을 포함해 모두 13개 사업이다.

핵심 선도프로젝트 이외에도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사업으로 ▲광주·전남 신규 국가산업단지 개발 ▲혁신·기업도시 기반시설 지원 ▲광양-부산간 경전선 복선 전철화 ▲광주순환외곽도로 사업 등이 포함됐다.

지식경제부 사업으로는 그린에너지 허브, 태양광, 풍력, 조력 등 에너지 발전장비 부품 거점사업인 신재생에너지사업과 광 기반융합 신산업, 차세대 LED 조명시스템 등 광소재 개발이 선정됐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이같은 발전계획을 다음달부터 2010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하기로 하고 시·도 협의체와 상설지원단을 설치하고 구체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시·도는 정부의 사업별 추진계획에 맞춰 실국별로 기본계획을 마련한 뒤 이달 말까지 세부 추진계획을 작성,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의 신성장 선도산업의 경우 다음 달 말까지 정부가 권역별 선도산업을 확정하기로 해 시·도의 역점사업인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최종 선정되도록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달 말까지 신재생에너지 부품·소재 산업화 추진계획과 광주지역 선정이 유력한 광소재 산업과 관련해 전남지역에서 추진가능한 사업계획도 발굴해 수립할 예정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선도프로젝트 선정과 관련해 일부 아쉬워하는 시각이 있지만 여타 선도산업 등을 통해 정부사업에 우리 현안이 반영되도록 추진계획을 마련해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
언론중재위원회와 상의하십시오
02)397-3000 www.pac.or.kr
언론중재위원회